

건설동향브리핑

제427호 (2013. 9. 2)

■ 경제 동향

- 7월 건축허가면적 부진, 건축착공면적은 양호

■ 정책 · 경영

- ‘8.28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 취득세 인하, 조속한 국회 처리로 거래 공백 사태 단축 절실

■ 정보 마당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조직 공정성 확보의 중요성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기술 · 기술인력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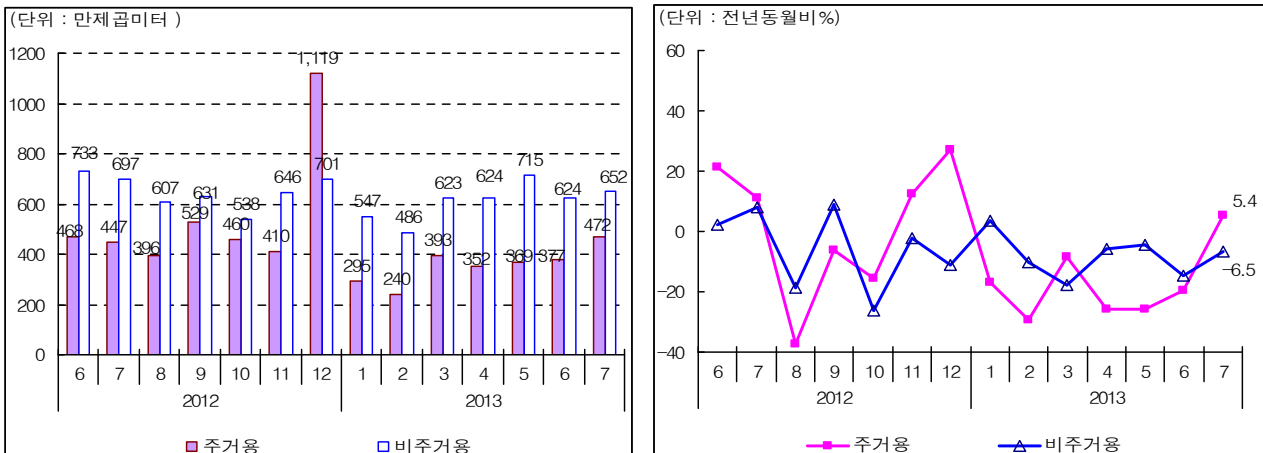
7월 건축허가면적 부진, 건축착공면적은 양호

- 건축허가면적 전년 동기비 1.8% 감소, 건축착공면적은 0.1% 증가 -

■ 7월 건축허가면적 7개월 연속 감소, 1~7월 누적 실적은 3년내 최저치

- 2013년 7월 건축허가면적은 비주거용의 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한 1,123.4만㎡를 기록,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함.
- 주거용은 수도권의 호조로 전년 동월 대비 5.4% 증가한 471.6만㎡를 기록, 지난 1~6월 까지 6개월 간의 감소세를 마감함.
 - 지방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14.9% 감소해 7개월 연속 감소함. 반면, 수도권은 서울과 경기도 등지에서 호조세를 보여 전년 동월 대비 24.4% 증가함.
- 비주거용은 상업용의 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 6.5% 감소함.
 - 세부 공종별로는 공업용과 교육·사회용이 각각 16.8%, 1.8% 증가한 반면, 상업용이 5.2% 감소하였으며, 기타 또한 30.5% 감소해 부진하였음.
- 결국, 1~7월 누적 건축허가면적은 7개월 연속 감소세로 인해 전년 동기비 11.8% 감소한 6,767.9만㎡로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함.
 - 주거용이 17.1% 감소한 2,496.7만㎡를, 비주거용이 8.5% 감소한 4,271.2만㎡를 각각 기록함.

<건축허가면적 및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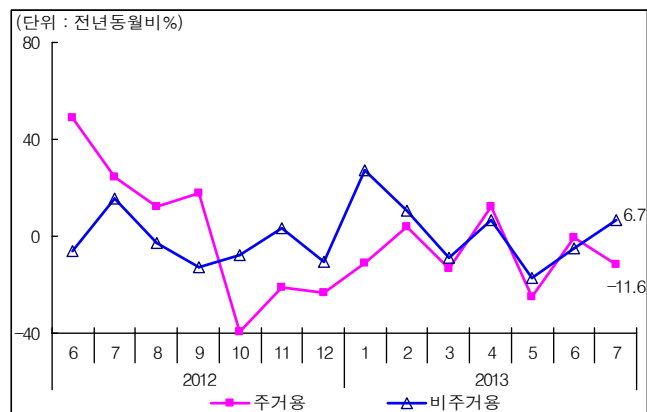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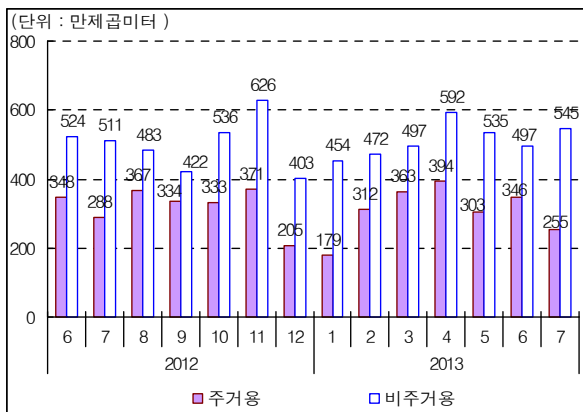


자료 : 국토교통통계누리

■ 7월 건축착공면적 3개월 만에 소폭 증가, 1~7월 누적 실적은 전년 동기비 2.3% 감소

- 7월 건축착공면적은 비주거용이 호조를 보여 전년 동월 대비 0.1% 증가한 799.9만㎡를 기록, 3개월 만에 소폭 증가함.
- 주거용은 지방의 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6% 감소한 254.5만㎡를 기록,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함.
 - 다만,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였어도 7월 실적으로는 최근 6년 간 두 번째로 높아 면적 자체는 다소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수도권은 전년 동월 대비 0.3% 감소한 118.8만㎡로 작년 7월과 비슷한 실적을 기록하였으나, 지방의 경우 아파트 분양 감소로 19.6% 감소하였음.
- 비주거용은 전년 동월 대비 6.7% 증가한 545.4만㎡를 기록, 3개월 만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 공종별로는 상업용과 교육·사회용이 각각 13.9%, 6.5% 감소하여 부진했으나, 상업용과 기타가 각각 23.9%, 53.1% 증가해 양호한 모습을 보임.
- 1~7월 누적 건축착공면적은 지난 5월과 6월의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한 5,744.6만㎡를 기록함.
 - 비주거용이 0.6% 증가한 3,593.4만㎡를 기록하여 다소 양호했으나, 주거용은 6.9% 감소한 2,151.3만㎡로 부진하였음.

<건축착공면적 및 증감률 추이>



자료 : 국토교통통계누리

박철한(책임연구원 · igata99@cerik.re.kr)

‘8.28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 전세 수요 매매 전환 유도 계획, 취득세 영구 인하 등 국회 처리 시급 -

■ 2013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세 번째 대책

- 박근혜정부는 2013년 2월 25일 출범한 이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종합적 성격의 4.1 대책과 과잉 공급을 방지하는 7.24 후속 조치를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시장의 회복은 커녕 전세난 심화 등 불안정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8월 28일 ‘8.28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룸.
- 매매 부진 속에 ‘전세→월세’로의 임차시장 구조 변화가 전세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야기하고, 이는 전세 가격의 고공 행진과 세입자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전세시장 쏠림 현상과 전세 가격의 상승 심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 ‘8.28 대응 방안’의 주요 내용

-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유도
 - 주택 구입 가능 계층의 주택 구입을 촉진하기 위해 4.1 대책 후속 법안(다주택자 등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의 차질 없는 추진, 취득세 인하(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인하), 저리의 장기 모기지 공급 확대 등을 추진
 -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 금리 분할 상환 방식의 주택 모기지 공급 확대(2013년 21조원→2014년 24조원), 소득 공제 대상 주택 가액 기준을 기존 시가 4억원(시가 5억~6억원 상당) 이하로 상향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부담을 완화
 -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구입 자금’ 지원 확대(2013년 예산 범위 내 : 약 2조원 예상), 주택 구입자와 국민주택기금의 주택 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 공유를 조건으로 주택기금에서 1%대의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수익 공유형, 손익 공유형)의 주택구입지원제도 도입
- 전월세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 기존 주택의 매입·전세 임대를 하반기에 집중 공급(9~12월 중 총 2.3만호, 수도권 1.3만호 목표)

- LH공사가 보유 중인 준공후 미분양주택 2천호를 9월부터 임대주택으로 활용
- 가을철 이사 시기에 맞춰 하반기의 공공주택 입주를 1~2개월(조기 입주 물량 1.6만 호) 앞당김.
- 민간 임대 사업자의 주택 구입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한 금리 인하(5%→2.7~3%), 대출 한도 상향(6천만원→최대 1.5억원) 및 매입 대상 주택 확대(미분양주택→ 미분양 및 기존 주택)
- 민간의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및 ‘모기지 보증’ 도입
- 서민 · 중산층의 전월세 부담 완화
 -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율을 현행 50%→60%로, 소득 공제 한도는 현행 연 300만원→500만원으로 확대
 - 국민주택기금의 저소득 가구(최저 생계비의 2배 이내) 전세 자금 지원 요건 완화(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원→1.2억원, 대출 한도 5.6천만원→8.4천만원)
 - 임차 보증금의 미반환 불안 해소를 위한 방안 강구(「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적용 대상 보증금 가액 기준과 우선 변제액 확대 추진) 등

■ 향후 전망과 실효성 확보

- 전월세난 해소 방안이 종합적으로 망라되어 있는 이번 대책은 주택 매매 수요의 심리적 회복, 전세 수요의 자가 수요 전환, 전월세 수급 불균형 완화 등의 효과가 기대됨.
- 그러나, 지원 대상과 물량 한정, 월세입자보다 상대적으로 전세입자 지원 강화, 민간 임대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와 공적 부담 간의 균형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음.
- 결국 ‘8.28 대응 방안’의 성패는 주택시장에 팽배해 있는 불안감과 불신감을 어느 정도로 해소시켜줄 수 있는가에 있음.
 - 즉,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 폐지와 취득세 영구 인하를 통한 거래 공백 해소 등의 법안 처리 결과에 달려있다고 할 것임.

두성규(연구위원 · skdoo@cerik.re.kr)

취득세 인하, 조속한 국회 처리로 거래 공백 사태 단축 절실

- 한계 존재하나 부동산 세제 정책 신뢰 회복 계기 마련 -

■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1%로 영구 인하

- 정부가 8.28 대책의 일환으로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을 발표함.
 - 법정 기본 세율은 4%임. 현행은 연말까지 예정된 감면 정책으로, 9억원 이하 1주택은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임.
 - 영구 인하될 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는 3%이며,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세율을 폐지할 예정임.
 - 논란이 되어 왔던 지방 세수 감소분은 전액 보전할 계획임.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 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추가적으로 거쳐 9월 중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하여 발표할 예정임.

■ 성과 :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세제 정책 신뢰 확보의 계기 마련

- 이번 취득세율 인하 결정은 지금까지의 만성적인 감면 정책을 지양하고, 안정적인 세제 운영을 통한 정책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함.
 - 취득세 기본 세율(4%)은 2005년 개정 이후 한 차례도 주택 부분에 적용되지 못함. 세율은 끊임없이 1~2%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
 - 취득세 감면 조치는 2011년 이후 현재까지 4번의 감면 정책 변경이 이루어짐. 초단기 대책의 경우에는 8개월의 한시적 조치가 존재하였음.
 - 한시적 조치에 의한 일몰 연장 방식 및 조정은 주택시장 참여자로 하여금 정책적 예측 가능성을 낮추어 정책 리스크를 확대시킴.
- 또한, 중장기적으로 주거 이동성이 감소하고 있는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한 세제 정책으로 판단됨.
 - 최근 들어 인구 이동자 수 및 인구 이동률의 감소 추이가 뚜렷하며, 선진국 대비 절대적으로 높은 주거 이동성도 선진국형 사회로 진행되면서 낮아질 가능성이 높음.
 - 주거 이동성의 감소는 전반적인 거래량 감소 및 취득세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높은 취득세율 구조는 주거 이동성을 더욱 약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한계 : 차등 구간 적용으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어려움 가중

- 지방 재정의 어려움 등으로 가격대별 차등 세율을 적용한 것은 지방세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며 단기적인 시장 활성화에도 일부 한계를 가짐.
 - 지방세인 재산세는 지방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는 ‘응익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임.
 -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이 제공받는 공공 서비스의 양과 품질의 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고가 주택에 대해 고율의 세율을 적용할 근거는 크지 않음.
 - 또한, 지금까지 감면 적용을 받아왔으나 이번 영구 인하 방침에서는 2%로 결정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시장의 상대적 어려움이 예상됨.
 - 더욱이 시장 침체 상황이 가장 극심한 수도권 외곽에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의 대형 아파트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 시장의 단기적 활성화에는 한계를 지님.

■ 소급 적용 시기 최대한 앞당겨야

- 정부(안)에 한계가 존재하나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소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조속한 국회 처리가 필수적임.
 - 지난 7월의 주택 거래량은 4만 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3% 감소함. 2006년 이후 7월 거래량 중 최저치 수준임.
 - 소급 시기는 지난 감면 정책의 적용시 소급 적용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음. 현재의 거래 공백 사태를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조속한 국회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향후 부동산 관련 세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장기적인 시장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정책의 새로운 목표 설정이 절실한 시점임.
 - 주택 보유 의식이 약화되고 있어 거래세뿐 아니라 보유세 등 관련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는 부동산 세제 전반의 상황을 재검토하여 개편 논의가 필요
 - 또한, 부동산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음. 과도하게 부동산 의존적인 지방세의 구조 개편 논의도 뒤따라야 할 것임.

허윤경(연구위원 · ykhur@cerik.re.kr)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조직 공정성 확보의 중요성

- 조직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조직 차원의 관리 필요 -

■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추세, 조직 차원의 관리 필요성 대두

-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현대 사회에서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조직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1997년에 607만 4,000명이었던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2001년에는 696만 2,000여 명으로 15% 증가하였으며, 2012년 현재는 591만 1,000명에 달함. 이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33.3%에 해당하는 수치로, 근로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 근로자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건설업의 경우, 2012년 3월 현재 전체 근로자 174만 4,000명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66만 6,000명으로 전체의 38.2%를 차지함.

■ 조직 구성원의 조직 몰입을 위해서는 조직 공정성이 더욱 중요

- 비정규직 근로자의 조직 몰입은 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함. 실제로 기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을 기피하는 가장 심각한 이유로 조직 몰입도 부족을 들고 있음¹⁾. 투입과 산출의 사회적 비교 결과로 지각된 공정성은 조직 구성원의 동기 유발에 바탕이 됨. 따라서, 조직 연구에서 중요한 논제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조직 공정성’은 조직 구성원들의 조직 몰입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임.
 - 조직 공정성은 크게 수행한 일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는데 초점을 둔 ‘분배적 공정성’과 의사 결정 과정이 진행되는 절차 혹은 방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절차적 공정성’의 두 가지로 나뉨.
 - 분배적 공정성 : ‘투입(Input)’과 ‘결과(Outcome)’를 핵심으로 함. 투입이란 ‘한 개인이 스스로 교환에 공헌했다고 지각하여 정확히 자신에게 대가가 올 것으로 기대하는 바’를 뜻하며, 결과는 ‘투입에 대한 대가로 받는 보수나 내적 만족 등 교환에서 얻는 것’을 말함. 조직 구성원은 투입과 결과의 비율이 서로 같을 경우에는 형평성을 경험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형평성을 느낌.

1) 김태기, 「비정규직 현황과 노동시장 정책 과제」, 대한상공회의소, 2001.

- 절차적 공정성 : 조직 내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용된 절차나 제도 운영 과정을 조직 구성원이 공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의미함. 즉, 임금을 비롯한 조직 내 직무 수행의 절차가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는가에 대한 지각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 최근에는 분배적 공정성과 절차적 공정성에 더하여 ‘상호 작용 공정성’이 등장함. 상호 작용 공정성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권한 보유자가 보여주는 대인적 처우, 정책이나 절차의 실행 과정에서 종업원이 지각하는 대인적 처우의 공정성으로 정의됨.
- 일반적으로 분배적 공정성은 계산에 근거한 경제적 교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절차적 공정성은 신뢰에 근거한 사회적 교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조직 구성원이 조직 내 분배적 공정성을 높게 지각한다면 업무 성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더욱 증가시킬 것임. 따라서, 조직 구성원은 조직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요구된 책임이나 공식적 보상 수준과 관련된 역할 내 활동에 더욱 집중할 것임.
 - 이에 비해 조직 구성원이 절차적 공정성을 높게 지각할 경우 조직에 대한 애정이나 충성 또는 신뢰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조직을 이롭게 하는 행위 등에 참여하는 정도가 증가하게 될 것임.

■ 조직 공정성,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상이한 고용 형태 운용시 더욱 효과 발휘

-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자신이 받는 처우를 정규직 근로자들과 비교함으로써 불공정성을 지각하게 된다고 함.
 - 기존 연구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직 내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높은 공정성을 지각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그렇지 못한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조직 몰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이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건설업체들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성과 향상을 위해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조직 공정성은 조직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상이한 고용 형태를 운용할 경우,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최은정(책임연구원 · kciel21@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내용
8. 22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주최, 「주택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TF 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여 - 최우선 변제 기준 및 전월세 전환율 관련 회의
	고용노동부	• 고용정책총괄과 주최, '일자리 창출 전문가 간담회'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실장 참여 - 신규 일자리 창출 개수 산정 방식 논의
8. 23	경기도청	• 주택정책과 주최, '전문가 간담회'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여 - 수도권 중심의 최근 전세시장 동향과 전망 관련 회의
	토지주택연구원	• '정책 토론회'에 건설경제연구실 두성규 연구위원 참여 - 주택품질보증제도에 관한 제2차 정책 토론회
8. 26	한국주택학회 · 매일경제	• '전문가 지상 좌담회'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여 - 전세시장의 진단과 해법 관련 좌담회에 토론자로 참석
8. 27	서울시	• 주택정책과 주최, '임대주택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토론자로 참여
8. 28	국토교통부	• 건설경제과 주최, '일자리 창출 전문가 2차 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실장 참여 - 건설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등 논의
	경기도시공사	• '신규 투자 사업 선정을 위한 부동산 전문가 자문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허윤경 연구위원 참여 - 신규 투자 사업 후보지 사업성 제고 및 리스크 해소 방안 회의
8. 29	한국골재협회	• '한국골재협회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 건설정책연구실 최민수 연구위원 참여 - 공제조합 정관 변경 및 사업 예산 승인
	여의도연구소	• '정책 간담회'에 건설경제연구실 두성규 연구위원 참여 - 관계 전문가 회의
8. 30	기획재정부	• 계약제도과 주최, '국가계약연구포럼 제2분과, 발주제도 개선연구팀 4차 회의'에 건설정책연구실 최민수 연구위원 참여 - 종합심사낙찰제 제도 설계 및 운용 방안 논의
	국토교통부	• 기술기준과 주최, '건설 엔지니어링 하도급양성화협의회'에 건설산업연구실 이의섭 연구위원 참여 - 건설 엔지니어링 하도급 양성화 방안 마련 회의

■ 연구원, '전환기 주택 재정비 및 리모델링 정책 방향 세미나' 개최

- 일시 : 2013. 9. 5(목) 14:00~17:00
- 장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제1 주제 : 주택 재정비 사업의 출구 전략과 도시 재생 정착을 위한 과제
(발제자 :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 연구위원)
- 제2 주제 : 저성장 시대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발제자 :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실 연구위원)
- 문의 : 기획지원팀(02-3441-0883, 0896) ※선착순 입장

기술 · 기술인력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최근 몇몇 대기업 중심으로 스펙 파괴 바람이 분다고 한다. 스펙보다 능력과 가능성을 보겠다는 것이다. 스펙만큼 기대하는 성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기업은 필요한 인재에 대한 구체적 명세서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해외건설은 글로벌 인재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인재는 프로젝트 관리(PM) 전문성을 갖춰야 하고 글로벌 언어 구사력이 높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디에서도 전문 기술자는 찾지 않는다. 기술 전문가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설계 · 시공 기술, 즉 생산 기술을 아웃소싱하거나 자체 내 소화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필자 눈에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에서 글로벌 챔피언 산업으로 올라있는 조선이나 IT, 그리고 자동차산업 등에는 반드시 기술력이 자리잡고 있다. 경영진이나 오너의 판단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보다는 경영의 일관성이나 기업가적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와 기술적 기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판단이다. 산업 스스로도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는 기술력과 이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인재기반이 글로벌 챔피언 산업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해외건설 발주자의 최대 관심은 어떻게 하면 양질의 품질을 갖춘 건설 상품을 최단 기간 내에 최소 비용으로 얻을 수 있는지에 있다. 발주자의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근본적인 수단은 기술이다. 그런데 최근 국내 건설은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것 같다. 마치 국내 건설 기술력은 문제 되지 않는 수준인 것처럼 말한다. 조선이나 IT, 자동차산업을 보면 어김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이나 인도 등 우리보다 인건비가 싼 국가와 가격으로 경쟁하지 않는다. 반면, 한국 건설은 신흥국 기업인 인도와 이집트,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을 두려워하고 있다. 싼 인건비 때문이다. 기술보다 가격 경쟁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다.

과거엔 ‘모방 · 추격형’ 기술에 관심을 두었지만 이제 ‘창조 · 선도형’ 기술로 가야 한다. 첨단만이 기술력이라는 사고의 틀도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알고 있는 기술도 조합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창조형 기술도 독립적이기보다 융합에 의해 만들어지는 게 대세다. 눈에 띄는 자극적이고 화려한 용어보다 기술이라는 낯익은 화두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과거 선박 건조장에서 2천톤이 넘는 콘크리트박스(케이슨) 20개를 동시에 제작하여 15km 떨어진 방파제를 건설한 일화가 있다. “바보야, 그게 기술이라는 거야”라던 고 정주영 회장의 말이 공감을 얻는 한국 건설로 다시 되돌아오길 기대해본다.

<건설경제, 2013. 8. 5>

이복남(연구위원 · bnlee@cerik.re.kr)